

2017 건설기능인의 날... 질 높은 일자리 만들자

‘적정공사비’ 확보 없인 안전도 불가능

글 쓰는 순서

- ① 열악한 건설현장 숙련공 수급 위기
- ② 근로자 안전, 질 좋은 일자리 ‘첫걸음’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여부는 일자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불안한 건설현장의 작업 환경은 기존 근로자들의 의욕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청년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과제가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와 건설업계까지 안전사고 저감에 발 벗고 나섰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국인 숙련 건설근로자 ‘공급 절벽’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안전’이라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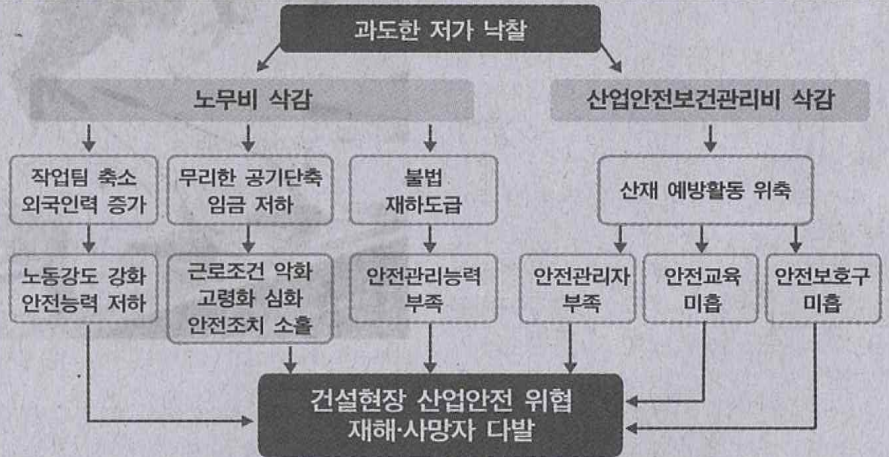
실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전사고가 늘어나기도 했다.

국도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2.5%, 6.1%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재해자 수는 5.7%, 사망자 수는 12.4%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수 대비 재해발생률은 2015년 6.6%에서 2016년 8.0%로 1.4% 포인트, 재해 대비 사망률은 1.96%에서 2.09%로 0.13%포인트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60여명의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주일에 10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하반기에도 이런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난 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499명)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망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정부나 업계의 안전사고 자정노력에 앞서 건설업의 구조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저가낙찰이 건설현장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저가낙찰 만회 위해 현장서 무리한工期 단축 시도 외국인 불법고용에 사고도 늘어

바로 ‘적정공사비’ 확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저가수주 현장에서 산업안전은 사치’라는 것이 오늘날 건설현장의 현주소”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건설사 간 과당 경쟁 등은 모두 과도한 저가낙찰에서 기인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저하될 경우 그 부담은 아래로 전가되고,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업자나 팀·반장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은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사고로 끝을 맺는다는 경고다.

‘최저가낙찰’로 부족한 공사비 탓에 적정 노무비 역시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제를 초과해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숙련도 탓에 안전사고는 더욱 빈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은 “공사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산재

가 더 많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 중 불법 취업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이 실시한 안전관리체계 설문조사에서는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좋지 않은 사업여건으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사업참여주체별 안전관리역량에 대한 평가에서는 △설계자 △근로자 △발주자 △하도급자 △원도급자 순으로 낮게 나타나 설계·발주자의 안전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복잡다단한 작업환경, 팀원들의 잦은 교체 탓”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업계의 입장에 건설산업연맹 송주현 정책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외치는 것은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라면서도 “다만 확보된 공사비가 맨 아래 근로자까지 안전하게 도달해 ‘적정노무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체불되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받게 돼 높은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근로자들의 이직은 줄어들고 숙련도는 높아져 안전사고 예방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